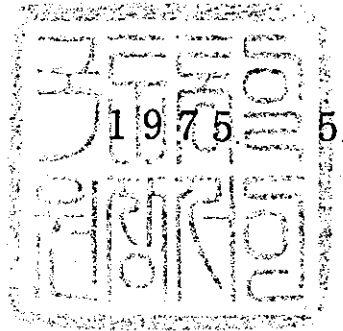




# 海外統一弘報展開方案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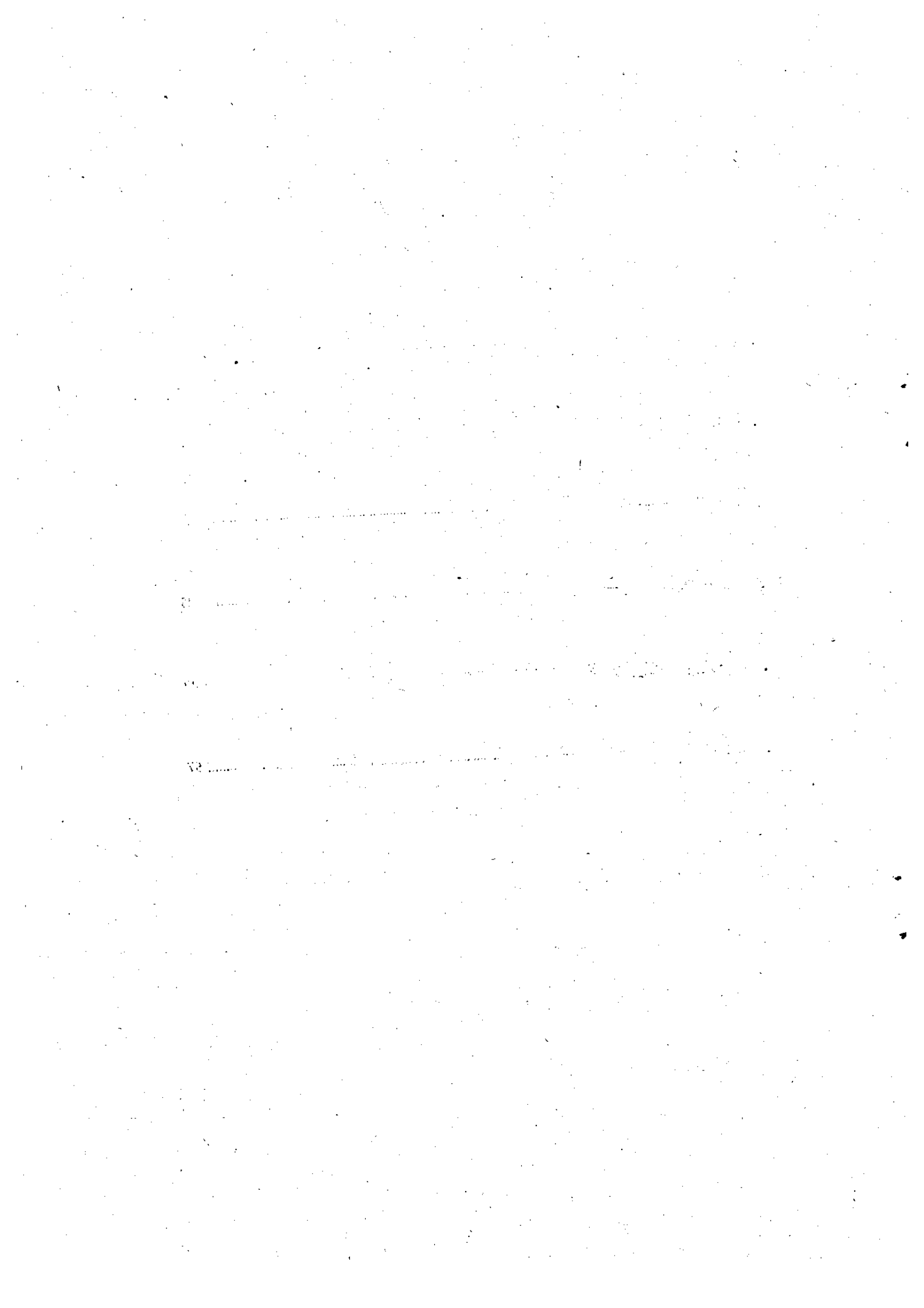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연구책임자 : 황 성 모

# 目 次

1 . 序 論 .....	1
2 . 北韓의 動向 .....	7
3 . 北韓의 統一戰略 .....	15
4 . 大韓民國의 統一政策 .....	25
5 . 統一政策 伝播方案 .....	37
6 . 結 論 .....	57



## 1. 序 論

현재의 南北韓 내치는 南北對話 이전 상태로 복귀한 상황이다.

최근 北韓의 무력증강, 그들 지도층의 전쟁준비 호언, 계속 발전되고 있는 휴전선 땅굴 등은 그들이 가면만의 平和統一 공세마저 포기한 듯한 느낌이다.

平和統一이란 우리민족의 悲願달성 전망은 또 그만큼 멀어진 듯하다.

그렇더라도 平和統一은 우리민족의 至上목표다. 최소한 北쪽을 向하는 항해자가 바라보고 나갈 北極星 이상이어야 한다. 北極星을 바라보는 항해자는 方向을 제시해주는 指標로서 그것을 바라본다.

平和統一은 바라보고 나갈 北極星일 뿐아니라 실현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平和統一이 오히려 北極星보다도 더 멀지 않나 하는 회의가 국민에게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懷疑는 자칫 국민에게서 統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약화하는 要因이 될 수 있다. 統一은 나와 관계없는 꿈속의 일

이요, 幻影이란 무관심을 널리 퍼지게 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러한 事態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막아야만 한다.

6.23 外交政策宣言 이후 統一을 그들의 專有物인양 弄하는 北傀의 통일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그렇다.

우리의 統一政策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파를 위한 心理戰의 필요가 여기에서 심각히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北傀의 赤化統一전략과 對南공세에 대한 비난은 어느정도 수행되고 있으나 우리의 統一政策에 대한 조직적 弘報가 아직은 不足하다.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이 具體적으로 무슨 내용이며 非合理的이나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理論的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以北에서 처럼 強制로 注入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의 目標에 대한 確信과 신념을 고취하는 努力은 總力安保態勢를 갖추는데 중요한 基本要素인 것이다.

相對의 主張과 理論에 대한 반박이란 소극적인 心理戰뿐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그 이론적인 尙當함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心理戰이 더욱 要請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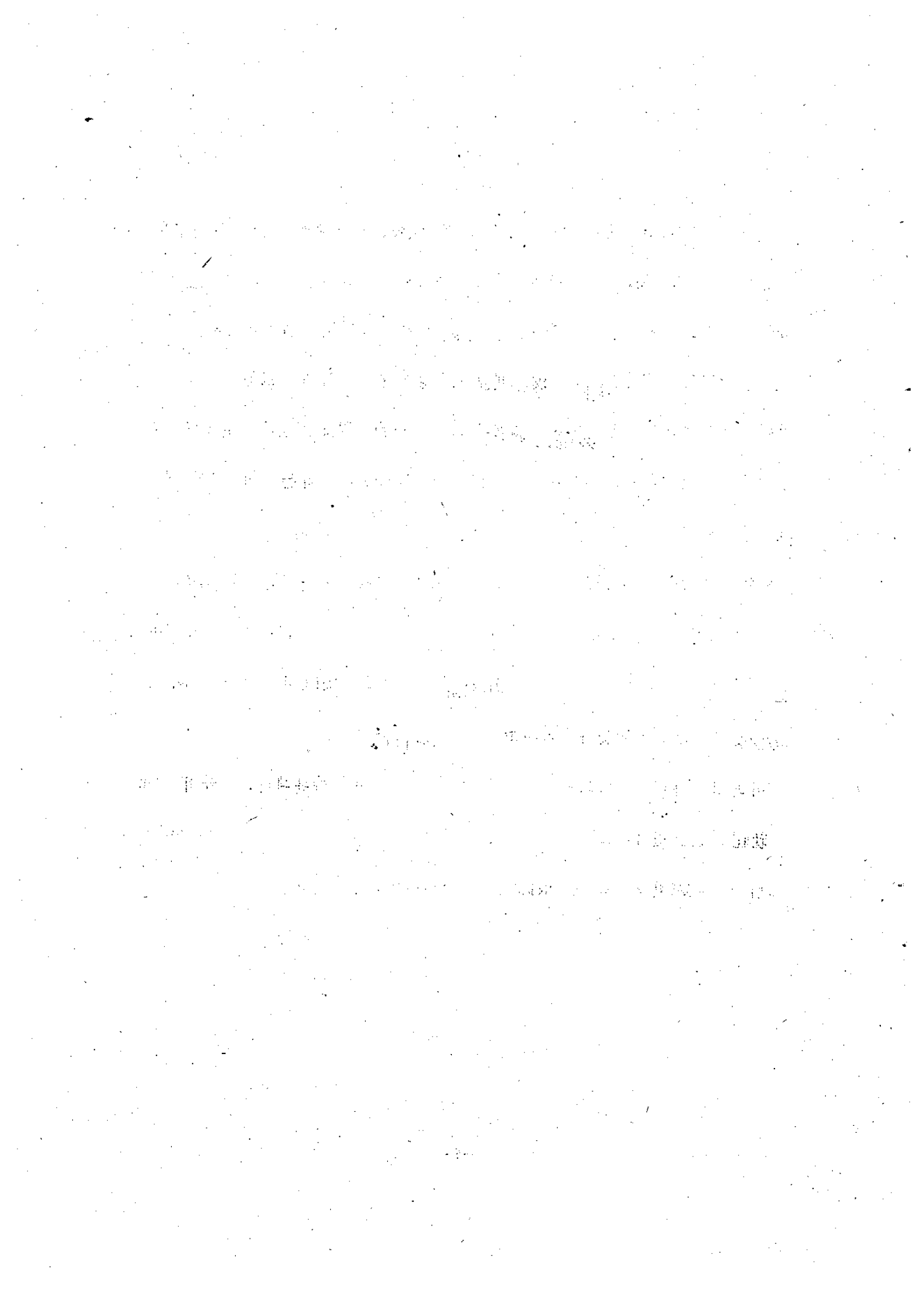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선 國內外와 南北의 현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南北 관계와 東南亞情勢는 우리의 平和統一 追求에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다. 「크메르」 共産軍의 승리와 越南에서의 정부군의 敗退는 「아시아」 國際共産主義者에게 승리의 幻想을 심어주기에 充分하다. 北傀共産主義者들도 이러한 印支事態의 진전에 고무됨이 分明하다. 그들의 赤化統一 야욕을 굳히는 한 要因이 될 수 있다.

특히 印支의 赤化過程에 처한 美國의 방관은 全世界 共産主義者들에게 美國의 自由世界 방위의지에 대한 오산을 불러 일으킬 可能性이 적지 않다. 사실 自由友邦國들로서도 美國의 안보공략의 信賴度에 대한 懷疑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共産主義者들을 고무시키리라 판단된다. 특히 虎視眈眈 機會만을 노리고 있는 北傀로서는 침략의 여건이 成熟되고 있다고 誤算할 중요한 根拠가 될 것이다.





## 2. 北韓의 動向

오늘날 北韓의 전쟁준비에는 상상치 않은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70年 勞動黨第5次大會에서 金日成은 『全住民이 銃을 쏠줄 알 며 총을 메고 있다』고 호언했는데 事實 그들은 소위 4大軍事路 線에 의한 全人民의 武裝化를 완료한 것 같다.

北韓의 정규군은 28개사단이라지만 그 밖에 막대한 예비병력 을 보유하고 있다. 즉 박격포·야포·전차·통신장비 등으로 正規 軍과 똑같이 중무장돼 언제든지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교도대가 23개사단이나 있다. 또 노농赤衛隊 1百26萬名中 1次動員이 可 能한 兵力만 23萬으로 이들은 고사포·야포·대전차포등으로 完全 武裝돼 이것만도 17개사단이나 된다. 이뿐 아니라 2次動員이 可能한 勞農赤衛隊 1百3萬, 붉은청년근위대 70萬을 합한 대병력 도 AK步銃, 다발총 등 개인용 소화기로 무장되어 있다.

특히 74年8월에는 행정단위로 조직된 노농적위대를 교도대와 통 합하여 赤衛軍으로 새로 편성, 후방지역 각군단에 배속 운영토록 함으로써 노농적위대의 戰術 운용체제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北僞는 7.4 성명 후 평화로운 대화를 진행하는 듯 위장하고 이번  
에서 공격용, 기습용, 교란용 각종무기를 대대적으로 導入했다.

공격용으로는 重戰車 3백 65대,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STYX 「미사일」을 장비한 OSA 級경비유도정 4척, 그리고  
地對地 「미사일」 FROG 7을 12基나 導入했다.

기습용으로는 MIG 전폭기 51대, 잠수함 4척을 들여오는 한편  
해안도시나 산업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火力艇과 上陸艇 1백척을  
전조했다. 동시에 「게릴라」 특공대를 대량 수송할 수 있는 교  
란용 AN 2 機를 1백 19대나 導入했다.

이와함께 그들의 공격장비와 基地를 休戰線쪽으로 南下移動시켰다.

73년 黃州에 있던 MIG 전투단을 谷山으로 이동했다. 이곳서  
서울까지의 비행시간은 3분 50秒, 그뿐 아니라 휴전선 근방으로 흐  
르는 礼成江을 따라 저공비행할 경우 우리의 「레이다」網에도 포  
착되지 않는 기습 철호의 지역이다.

같은 9월에는 FROG 5와 FROG 7 「미사일」을 平壤부근에서  
開城지역으로 이동했다. FROG 5의 경우 安養까지 FROG 7의 경  
우 平沢까지 사정권에 든다.

그리고 도하장비도 이해 8월 까지 板門店 바로 北쪽인 礼成江下

流에 집결했다.

특히 놀라울 것은 74年 11월 15일과 75年 3월 19일 휴전선에서 발견된 南侵用 지하 「터널」이다.

75年 3월에 발각된 제 2의 땅굴은 총길이 3천5백 「미터」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南쪽으로 1천1백 「미터」까지 이른다. 땅굴의 규모는 평균 높이 2 「미터」, 폭 2.2 「미터」로 폭과 높이가 3 「미터」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 땅굴로는 소형車와 야포등 중장비 그리고 시간당 2만4천명까지의 무장병력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한 땅굴은 이외에도 12개쯤이 더 있는듯 하다는게 「홀링스워드」 韓美軍團長의 말이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제 2의 땅굴같은 규모면 비정규전 뿐 아니라 정규전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땅굴공사는 71年 9월 金日成이 對南事業總責 金仲麟과 軍總참모장 吳振宇에게 速戰速決戰術을 강조함에 따라 시작했다.

땅굴공사는 대체로 금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30주년기념일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과 병행해서 73年 8월 28일 金英柱 平壤側 공동위원

장의 명의로 일방적인 南北對話中斷宣言이 있은후 金日成을 위시한 北愧責任者들은 폭력에 의한 韓半島赤化를 공공연히 포명하고 있다.

74년 3월 4일 金日成은 「알제리」의 「부메디엔」 대통령 환영대회에서 南半部人民의 反政府鬪爭을 언제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 직후 비공개로 소집된 中央黨연락부 안내조장회의에서 땅굴을 이용한 속전속결전쟁론을 폈다. 金日成은 戰爭이 개시되면 특수 8군단과 경보병부대등 특공대들을 육상안내조원들이 즉각 책임을 지고 안내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73년 10월 10일 人民軍 지휘관 및 정치일꾼회의에서 총참모장 吳振宇는 『만일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南半部놈들을 하나 남김없이 싹 쓸어 버리겠다는 폭언을 했다. 人民軍總政治局長 李勇武도 74년 2월 8일 『5대강령을 끝내 실현키 위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관철하겠다』고 장담했다.

금년들어 1월 15일 金日成은 농업자대회에서 『어느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라. 전쟁준비를 잘 하려면 군량미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등 전쟁준비의 조속완수를 촉구했다. 또 黨·軍의 고위간부를 모아놓은 非公開席上에서 『黨創建 30周年이전까지 6개년 경제계획과 땅굴공사를 빨리 끝내 戰爭

準備를 완료하여 우리의 課業인 祖國統一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言行은 平和統一이 아니라 武力赤化統一이 그들의 기본목표이며 이를 위한 準備가 모두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3.北韓의 統一戰略

北韓은 계급혁명과 세계共産化의 필연성과 當爲性을 主張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그 存在價值를 찾고있다. 統一에 있어서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사회정치체제가 실현되는 통일이 아니면 어떠한 統一觀도 용납되지 않는다. 오직 革命을 통한 共産化統一만이 그들의 추구하는 목표다.

그들은 韓半島의 共産化를 위해 소위 3大革命역량의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北韓의 革命基地化 韓國의 혁명역량 강화 국제혁명지원역량강화가 공산화의 선행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金日成은 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알아르함」 社会科学院에서 「朝鮮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南朝鮮혁명에 대하여」란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祖國의 통일, 朝鮮革命의 자주적 승리는 결국 3大革命力量에 달려 있다. 첫째로 공화국 北半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해 우리의 革命基地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南朝鮮人民들을 정치적으로 政治적으로 각성시키고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南朝鮮혁명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셋째로 朝鮮人民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戰略目標은 政治的으로 韓國內部에서의 폭력혁명을 기도하고 군사적으로는 武力에 의한 南侵力量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

이상의 3大力量 가운데 우선 南韓의 革命力量과 그 전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南韓革命의 타격대상은 첫째가 美帝國主義勢力 이고 다음이 「美帝에 추종하고 있는 지주·매판자본가 및 반동관료」이며 「日本軍國主義勢力을 美帝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농민 뿐 아니라 청년학생 지식인·民族資本家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위 美帝를 革命의 제 1타격대상으로 보는 것은 美國의 對韓政策과 韓·美同盟關係를 赤化統一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쟁의 대상으로 지주·매판자본가를 들먹이는 까닭은 전통적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南朝鮮革命」을 역시 階級革命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傀는 韓國政府가 地主·매판자본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주장인 만큼 결국 韓國政府를 반대한다는 뜻이 된다.

한편 사회계급으로 보지 않는 청년학생과 지식층을 革命의 동력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민족의식이 예민할 뿐아니라, 「노동자

농민과 革命운동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란 설명이다. 특히 민족자본가까지 革命的 협조세력 범위에 넣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난센스」라 하겠으나 그들 나름으론 민족자본가  
가 「美帝」와 「매판자본가」에게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反帝  
戰線에 참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혁명전략은 그들의 소위 「人民民主主義」 革命戰略에  
기초하고 있다.

즉 합법·半合法·非合法鬭爭은 물론 폭력·비폭력투쟁·정치·경제  
투쟁 등 大小規模의 모든 투쟁을 전개하여 韓國內의 地下黨組織·北  
韓同調勢力부식·政府와 國民離間·反共意識 둔화에 주력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통일전선이 형성돼 南韓内部에 政治·社  
會的 混亂이 高潮되고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하며 南北韓間에 세력  
균형이 깨어지는 결정적時期를 조성하자는데 최종적 目標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목표추구는 그동안 계속 좌절돼 왔다.

金日成은 「인도네시아」의 「알아르함」 사회과학회 연설에서 『南朝  
鮮은 국내반동의 집결처이며 소굴』이라느니 『南朝鮮에는 반공사상  
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이를 시인했다.

특히 소위 혁명세력을 포섭·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당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不法化되어 있다. 지하당을 조직하려 했으나 통혁당 및 人革黨 그리고 많은 간첩활동이 적발돼 좌절을 겪었다. 北傀가 7.4 성명후 反共法등 공산주의 활동에 결정적 제약을 가한 법체제의 폐기를 들고나온 사실은 이러한 전략의 次元에서 파악돼야 할 것이다.

「南朝鮮革命力最強化」가 이렇게 부진한데 비해 北半部基地化는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듯 하다.

이들의 전쟁준비가 공격이나 방위적이냐가 문제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극적 방어전략이다. 이는 공격과 방어를 같은 次元에 두는 개념이다. 수동적으로 전쟁에 들어갔을 경우 공격으로 전환하여 統一目的을 수행할 뿐 아니라 韓國방위체제에 虛点이 들어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나 戰爭을 도발한다는 것이다.

국제혁명역량도 차츰 호전되고 있다고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 같다. 60년대에는 中·蘇紛爭, 美·蘇平和共存關係가 그들의 赤化 統一 目的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불만이었다. 黨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지금 사회주의진영은 내부의 의견 相異로 인해 全一的대오로 단합된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계 혁

명운동과 국제정세의 발전에 否定的 影響을 미친다』고 불명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解決 「무드」와 中共勢를 업고 7.4 성명후 국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진출을 하게되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74년 「유엔」 總회에서 駐韓 「유엔」 軍司解体・外軍철수를 골자로 한 共產側 결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으나 可否同數였다는 사실에 고무될듯 하다. 특히 최근의 印支事態는 국제공산주의 革命戰略의 유리한 결정적인 정세발전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非軍事的 수단에 의한 「南朝鮮革命」이 뜻대로 진척되지 않는 만큼 군사적 수단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기 마련이다. 최근 北傀의 전쟁준비는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統一目標가 赤化統一에 있는 만큼 그들의 평화통일공세는 위장전술이며 「革命」을 위한 準備工作의 길을 트려는 한 방도로 파악해야겠다.

그들은 6.25 南侵직전 세차례에 걸쳐 위장 평화공세를 편 实例가 있다. 즉 6월 7일 방송을 통해 8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南北總選舉를 실시하여 단일 입법기구를 구성하자느니, 6월 10일에는 曹晩植선생과 간첩 李舟河, 金三龍을 교환하자느니, 6월 19일에는

南北立法機關을 합쳐 단일국회를 구성,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느니 했  
었다. 그후 1주일도 못돼 南侵이 시작됐다.

71년과 72년 南北적십자 회담 및 南北聲明을 전후해 南侵땅  
굴을 뚫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7.4 성명마저 그들의 본래 목  
적에 이용한 것이 明白하다.

또 그들이 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직후 밝힌 金日成  
의 소위 5大統一綱領이란 것도 이러한 위장공세의 虛構性을 드러  
내고 있다.

5大綱領의 內容은 △군사대치해소 및 긴장완화(평화협정)

△多面的合作과 交流 △대민족회의소집 △고려연방공화국이란 이름의  
聯邦制 △統一될 때까지 연방에 의한 단일 유엔 가입등이다.

우선 연방제는 60년 8월 金日成의 연설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그후에도 간혹 반복된 것이 있다. 73년 6월 23일 5대강령의  
하나로 새로운 형태를 갖춘 내용은 南北이 「高麗聯邦共和國」이란  
이름의 연방을 구성해 이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것이  
다. 거기에는 연방의 국호·연방제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만 막연  
하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 에컨대 중앙정부의 형태  
나 支分國과의 권한배분등에 관해서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

원래 연방제는 동일한 국가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南北韓 같이 이념과 체제가 전연 상이하고 상호간에 극도의 不信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도저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이는 우리가 6.23선언에서 표명한 南北韓의 동시 「유엔」 가입을 반대하기 위한 술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또 人口比例에 의한 自由총선거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연방제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드는데 방해된다는 구실을 내세워 駐韓 美軍을 철수시키려는 술책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다음 대민족회의 소집은 南北조절위 같은데서도 번번히 들고 나온 제안이다. 그 내용은 南北 각각 수백명씩 양쪽을 합쳐 천명 이상의 각계각층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이나 조절위 같이 불과 10여명의 한정된 인원이 모인 회의에서도 만방의 의견대립으로 실질문제 합의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게 우리의 경험이다. 그런 판국에 천여명이 모인 군중대회같은 회의에서 복잡미묘한 통일문제를 妥結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南北對話가 對南革命戰略에

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南北調節委를 有名無實하게 하려는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들은 또 南北韓軍隊의 각기 10萬以下로의 감축, 「유엔」 司令部의 美軍철수, 군비경쟁의 중지와 군장비의 도입금지 등을 내용으로한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 平和協定案도 그 眞意가 南北韓의 平和共存秩序를 수립하자는 데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반대로 「유엔」 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韓·美共同防衛體制를 崩壞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20여년간 韓半島에서 平和를 간신히 維持해 온 현존 休戰協定을 실질적으로 死文化시켜 그들의 기본목표인 赤化統一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結論적으로 北傀의 統一政策은 혁명을 통한 韓半島의 赤化일 뿐 대화를 통한 合理的方案의 모색은 아님이 分明하다.

#### 4. 大韓民國의 統一政策



#### 4. 大韓民國의 統一政策

大韓民國의 統一政策은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自由總選舉란 기초를 유지해 오고 있다.

6.25 動亂中과 自由黨 政府때 北進統一이란 無理 통일정책을 표방했으나 그후 잘못 平和統一원칙을 지켰다.

休戰후 54년에 열린 「제네바」會談이후 韓國政府의 統一政策의 變遷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統一政策에 언급하고자 한다.

54년 5월 22일 당시 卞榮泰 外務長官은 韓國統一에 관한 14개항목의 종합적인 제안을 했다. 이것이 60년대까지 우리 統一정책의 근간을 이뤘다.

14개항 제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6개월이내에 「유엔」 감시하에 大韓民國憲法節次에 따라 비밀·보통 성년자 투표에 의지하며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를 실시할 것. △ 선거구의 정확한 人口比例에 따라 新국회의원 數를 정하기 위해 「유엔」 감시하에 國勢調査를 실시할 것. △ 「유엔」 감시단원과 입후보자들의 이동 및 언론의 완전한 自由를 보장할 것  
△ 總選舉後 서울에서 개최될 全韓國立法府가 개정할 때까지는 大韓

民國憲法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할 것. △선거일자 1개월전까지  
中共軍은 完全撤收할 것. △「유엔」軍의 철수를 개시하되 「유엔」  
軍의 철수는 통일정부가 全韓國에 대한 完全統治를 달성하고 이를  
「유엔」이 확인할 때에 완료할 것. △統一韓國의 領土保全과 獨  
立을 「유엔」이 보장할 것.

그러나 공산측은 「유엔」의 선거감시 役割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參戰 16 個國은 6월 15일 일방적인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제네바」會談을 끝냈다.

공동선언의 내용은 ① 「유엔」이 韓國에 있어서의 평화적인 解  
決을 모색하도록 추천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정당한 權限이 있으며

②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을 수립하기 위해 土着人口比例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할 진정한 自由選舉가 「유엔」감시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네바」會議가 실패하자 韓國政府는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이  
百害無益하다는 결정을 굳히고 休戰協定の 파기와 전쟁재개론이  
다시 대두했다.

이리하여 통일방안으로는 단독 北進통일론과 「유엔」감시하의

北韓만의 총선거론이 다시 주장되었다.

다만 「유엔」총회는 60年代까지 「16개국선언」에서 제시된 「유엔」감시하 南北韓総선거를 韓國統一問題에 관한 「유엔」의 원칙으로 거듭 재확인했다.

北韓만의 선거 내지는 武力北進統一을 내세우던 自由黨政府가 4.19革命으로 물러나자 한 때 각양각색의 統韓論이 百出했다.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南北交流論으로부터 中立化統一論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혼미속에서 執權한 民主黨政府는 武力統一論을 철회하고 「南北韓총선거에 의한 平和統一」이란 「제네바」원칙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입장에서 鄭一亨外務長官은 60년 8월 24일에 발족한 외교시정방침 7개항에서 『북진통일같은 무모하고 무계획한 「슬로건」을 지양하고 「유엔」의 결의를 尊重하며 「유엔」감시하에 南北韓을 통한 自由선거에 의한 統韓政策을 수행한다.』고 천명했다.

국내적으로는 많이 달라졌으나 外交적으로 달라진 것은 『「유엔」決議에 依하여』란 어구를 『「유엔」決意를 尊重하여』로 변경한 것 뿐이다.

민주당정부의 統一方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의 천명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61년에 들어서 일부 革新系·學生層 및 보수정치인에 이르기까지 中立化統一論과 南北交流論이 성행했다.

61年 5月 4日 서울大民族統一聯盟이 南北統一의 촉진을 주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南北學徒會談을 열어 南北學徒間의 記者 교류·학술토론회·예술 학문 창작의 교류, 체육대회개최를 제창했다. 5월 5일에는 民族統一全國學生聯盟이 발족, 이 주장을 지지하면서 南北學徒會談을 5일안에 板門店에서 개최할 것과 정부의 편의제공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學生들은 5월 8일 성명을 통해 회담을 단행할 태도를 표명하고 5월 20일 대표를 板門店으로 보낼 것까지 결의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5월 13일 北僞측의 支持를 받았다.

이러한 통일논의의 혼란은 61년 5월 16일의 군사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군사정부는 反共体制의 재정비, 국가자립경제의 재건·民主的力량의 배양으로써 국토통일에 대비한다는 「反共·先建設·後統一」의 방침을 세웠다.

혁명정부의 통일방안은 61년 6월 24일 金弘喆外務長官의 聲明으로 『武力에 의한 國土統一을 원치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고 「유엔」 감시하의 南北韓 總選舉實施를 강조한다』고 전명되었다. 이러한統一방침은 民政移讓에 의한 第3共和國 탄생 이후에도 변함없는 정부의 방침으로 60年代를 일관했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 우리의 통일정책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추어 적극적인 적용 模索의 期로 접어들었다.

우선 70년 8월 15일 朴正熙 大統領은 光復節 慶祝辭를 통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平和統一 構想을 내외에 선언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우선 北韓이 전쟁도발행위와 무력赤化統一 야욕을 포기할 것. △北韓이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南北韓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

△平和統一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한다면 北韓의 「유엔」 참석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南北韓의 어느편이 보다 더 國民을 잘 살 수 있게하는 體制인가를 입증하는 開發·건설과 창조 의 선의의 경쟁에 나서자.

이 「8.15선언」은 分斷 4半世紀 南北韓관계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의 새로운 出發을 期하는 의미가 있었

다.

1년후인 71년 8월 12일 大韓적십자사는 離散家族찾기를 위한 南北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즉각 예비회담을 거쳐 南北간에 본회담까지 열리게 됐다.

이 제안이야말로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人道的 견지와 아울러 그때까지의 南北對決關係를 對話關係로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미 72년 7월 4일에는 南北이 다같이 統一問題를 자주적·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한 南北공동성명이 공포되었다. 이는 南北대화관계를 공식화한 것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후 다시 1년후인 73년 6월 23일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發表되었다. 이 선언은 평화적 통일의 先行要件으로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천명했다.

그러기 위해 南北韓이 서로 內政 간섭과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되고 統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이념과 체제에 關係없이 互惠平等의 원칙하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開放을 천명했다.

이 6.23 선언은 분단 이래 30년간 韓半島에 있어서의 冷戰的  
대치상태를 과감히 제거할 것과 平和定着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달성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후 74년 1월 8일 朴大統領은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韓 相互不  
可侵協定 締結을 제의했다.

이 협정의 내용으로는 南北韓이 서로 절대 침범하지 않을 것과  
內政不干涉 및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이 明示되어 있다.

이 제의는 韓半島의 전쟁을 예방하고 현재의 휴전체제를 보다 높  
은 次元으로 발전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朴大統領은 다시 74년 8월 15일 그간에 제시된 통일정책을  
집약 체계화 하여 平和統一 3大原則을 제시했다.

3단계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南北韓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  
시킬 것.

둘째, 南北對話를 성실히 진행시킴으로써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룩하며 南北間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시키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南北韓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

다.

이같은 우리의 단계적 통일원칙은 오늘의 환경여건 속에서 戰爭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의 統一에 접근하는 가장 합리적 방법일 수 밖에 없다.

南北間같이 이념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面에 있어 이질적이며 상호 敵對的인 두 체제를 그대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한체제의 다른 체제에 대한 정복이외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선 그 異質性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러단계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되려면 무엇보다 南北間에 평화확보가 전제되어야 겠다.

北韓측은 당장 정치를 포함한 적극 交流를 하자고 하나 이는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서로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서 分斷의 고통을 해소하는 점진적 노력이 기울여져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측이 人道的見地에서 제의한 추석성묘단의 상호방문, 서신교류, 노부모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 같은 것 조차 받아드리지 않는 北傀가 당장 交流를 확대하고 一括妥結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南北적십자사회담과 南北調節委는 회의를 거듭했지만



赤十字會談은 5개항의 의제를 선정했을 뿐이며 南北調節委는 73년 8월 28일 北韓側 共同委員長의 일방적 대회거부성명으로 形骸化됐다. 가끔 부위원장회의가 열려 舌戰만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南北對話가 이처럼 진전이 없게된 근본원인은 北韓이 南北對話를 하나의 투쟁수단으로 삼고 공산주의자들의 協商戰, 心理戰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본목표는 시종일관 赤化統一에 있으며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에서 얻어내려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엔」軍司의 해체·駐韓美軍의 철수와 6.23 선언의 취소·反共法 國家保安法의 폐기·체포된 間諜의 석방등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들은 對話를 통해 韓國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며 국내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의 소위 人民革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

이러한 그들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폐쇄 체제인 北韓에 불리한 영향이 올지 모른다는 속셈에서 南北對話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것 같다.

## 5 . 統 一 政 策 傳 播 方 案

## 五. 統一政策 傳播方案

지금까지 南北韓의 統一政策과 北韓의 이른바 平和統一攻勢 뒤에 감추어진 武力赤化統一野慾을 대중 일별했다.

그런데 문제는 統一政策이 정부주도형일뿐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막연히 北韓共產主義者의 目的은 나쁘고 우리의 입장이 옳다는 式의 느낌과 감정만을 가진 국민이 많은게 사실이다.

왜 우리의 平和統一論이 합리적이나는 체계적 이론무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극복해야 한다.

우선 統一論에 對한 國論合理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無知를 조장하는 중요한 몇몇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統一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다.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期待가 있을뿐 現實的으로 회의하거나 縮念하고 있음을 경험으로 알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國土分斷後에 出生한 젊은 層에게 보다 현저하다.

군동안의 反共教育의 결과로 北韓治下의 사람들을 무슨 괴물같은 존재로 여기고 평화공존이나 재통일을 거의 不可能하거나 먼 후대의 것으로 달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南北對話로 약간 교차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은것 같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指導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南韓만의 復興·建設이 國복의 目標로, 統一이란 먼 훗날의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든 經濟·社會計劃이 分斷과 對峙를 既定事實로 出発하고 있으므로 統一後의 激化와 混亂을 피하려는 潛在的인 性向을 갖기 마땅하다.

오늘날 統一을 民族의 地上目標로 생각하는 사람은 徹底한 滅共主義者거나 民族的 理想主義者밖에는 없는듯 하다.

둘째로, 統一論의 環境變化다.

自由黨時節에는 北進統一만이 合法的 統一論으로 認定됐다. 그때는 平和的統一論議나 中立化論議는 곧 容共으로 탄압받았다. 4. 19後 5. 16까지 暫時 百家爭鳴의 統一論이 나오다가 5. 16後 強力한 統制를 당했다. 군사정부는 民主黨의 平和統一政策을 도습했으나 60年代中에는 활발한 統一論議가 나올 社會環境이 되지 못했다.

70年 8·15 宣言以後 平和統一政策을 具體化하는 政府의 施策으로 72年 7·4 聲明以後 活潑한 統一論議가 있었으나 南北對話의 形骸化와 北傀의 도발격화로 統一論議는 다시 70年 以前으로 환원된 느낌이다. 印支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得勢以後 이러한 傾向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니 누구도 統一論을 진지하게 꺼내기를 꺼리는 實情이다. 이러한 社會環境의 急速한 發展과 後退는 統一에 대한 無關心을 재촉하게 된다.

세 계로 政黨間의 統一問題에 對한 調整機構가 없어 진지한 立場 통일이 되어있지 않다. 平和統一이란 原則에는 大體로 與野黨間에 方向一致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는 方案에 對해선 分明한 基本立場의 合意가 없다.

與黨인 共和黨에 國土統一特委가 있고 第1野黨인 新民主黨에도 統一問題特委가 있으나 立場조정을 위한 會合과 意見交換이 전혀 없는 狀態다.

특히 新民主黨은 6·23 統一外交政策宣言을 支持했으나, 같은 野黨 중에도 第3黨인 統一黨은 이 宣言에 反對하는 立場을 分明히 했다.

統一論議나 外交路線에 關해서는 超黨的인 기구를 두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解決하는 方案이 곧 統一政策 전파를 위한 心理戰방안이 된다. 統一問題에 대한 國論의 合意課程과 결정된 합의를 國民에게 설득하고 北傀의 宣傳攻勢를 봉쇄하는 것이 心理戰의 基조인 것이다.

國論의 合意과정 國民에 대한 전파와 北傀선전공세의 봉쇄, 매스컴 活用方案教育 海外弘報 對北宣傳의 順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① 統一에 대한 國論의 合意課程

民主政治는 個人과 個人, 集團과 集團사이에 價值觀이나 政策問題를 둘러싼 意見 對立을 당연한 일로 받아드린다. 그러나 이러한 多樣性이 國民的 團結을 해치거나 國家意思의 통합확정에 逆作用을 해서는 안된다.

國論의 民主的 統合決定은 國民的 토론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實際 國民들이 모여 기탄없는 討論을 하기는 不可能하므로 政策立案者나 「오피니언·리더」, 그리고 專門家들의 意見交換을 통해서만 해지는 수 밖에 없다.

이들이 個別的 또는 集團的으로 意見을 격의없이 교환하는 機會를 많이 가져 世論을 통합할 수 있는 素地를 부단히 마련해가는 것이 重要하다. 이러한 의견교환이 公式的 또는 非公式的으로 行해지던 간에 國家가 當面한 狀況이 判斷이나 國家의 政策 進모에 關係 솔직대담한 의견교환으로 共通된 견해의 形成에 努力해야한다. 그러한 統一에 대한 國論의 民主的 統合課程에서 마지막 손질을 加하는 곳이 國會와 統一主体國民會議가 될것이다. 그러나 國會나 國民會議의 國論結集은 어디까지나 基本原則의 提示에 끌여야 한다. 變化하는 情勢속에서 政府가 임기응변으로 對処 해나갈 裁量의 幅을 가져야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現實은 오히려 統一問題에 對해 國會나 國民會議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모든것을 政府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與野政黨이 統一·安保問題에 對한 超黨派的 견해를 조정하지 못하는데서 연유할는지 모른다.

그럼더라도 國會가 統一문제에 對한 國論結集에 參與하지 못 할때 政爭이 끼여들 素地가 생긴다.

이는 統一·安保問題에 關한限 意見對立이 측면화하지 않도록 意見一致를 内外에 誇示해 두어야 한다는 當爲에 손상을 가져올 우려

가 있다.

同時에 이러한 國論結集 - 合意課程이 効率的으로 遂行될때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의 關心이 喚起되고 自然히 전파되는 效果를 갖게 될것이다.

## ② 國民에 대한 統一政策浸透方案

決定된 統一方案을 國民에게 전파하는 일은 統一政策의 決定課程 以上으로 重要한 일이다. 大多數 國民은 南北韓關係를 둘러싼 情勢變化에 어두운 탓으로 統一·安保問題에 關係선 大體로 受動的이다. 따라서 政府나 政黨 「매스컴」에서 不斷히 啓蒙 宣傳教育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見解도 쉽사리 받아들리는 취약성을 갖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決定된 統一國論을 大衆에게 教育·啓蒙·善導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國論의 宣傳 電波活動은 主로 「매스·미디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모든 「매스컴」이 統一問題와 南北關係에 관련되는 보도는 물론 世論을 국가이익에 알맞는 方向으로 유도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統一政策電波를 「매스컴」에만 맡겨서도 안된다. 신문을 안보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청취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뿐더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講演・座談・對話의 形式으로 구두계몽할 수 밖에 없다. 知識人・公務員・政黨 및 社會團體所 屬員들이 대중과 접촉하는 機會를 만들어 統一政策에 關해 說明할 必要가 있다. 「매스컴」을 통한 間접접촉에 比해 연설이나 對話를 통한 直接접촉이 더 效果的일 수가 있는 만큼, 「매스컴」에 접촉할 機會를 갖는 國民에 대해서도 直接접촉에 의한 教育과 宣傳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그러나 直接접촉에 의한 教育은 일정한 方向을 갖추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直接대화를 맡을 지식인 公務員・政黨, 社會團體所屬員들에 對한 事前 宣傳이 充實해야 한다. 이들에 對한 사전선전은 「매스컴」・講演・教育・또는 刊行物에 의해서 遂行되어야 할것이다.

각급사회의 核에 대한 教育과 그를 통한 拡散電波야말로 國民들에게 統一政策을 전파하는 基本方案이 되어야 한다.

### ③ 「매스컴」活用

국민들과의 直接접촉 뿐만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方法은 뭐니뭐니해도 「매스컴」을 통한 統一政策의 電波方法이다.

「매스콤」은 輿論을 일으키고 집중시키고 강화하며 결정을 傳達하는 効果的 媒介体이기 때문이다.

輿論은 元來 個別的 意見의 集合体다 이것이 個人들에 대한 說得과 組織化를 통해 힘을 얻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外部的인 자극과 事象을 이미 머리속에 들어있는 先入見, 偏見, 고정관념에 立脚해서 받아드리는 性向이 있다.

따라서 啓蒙이나 宣傳은 사람들이 믿고있는 것을 正面에서 否定하는 접근방법을 해선 成功하기 힘들다. 그러나 먼저 先入見과 固

定觀念의 根拠를 파헤쳐나가는 일부터 始作해야 한다. 統一問題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면 일반적으로 共產主義体系와 自由民主主義体制가

과연 武力이 아닌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될수 있을까 하는 懷疑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懷疑를 無視하고 곧 平

和統一이 될 수 있는듯이 啓蒙해선 成功하지 못한다. 오히려 平和的統一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長期的 目標로 생각하고 그에

앞서 分斷의 苦痛을 해소하고 同族의 相殘인 戰爭을 避하고 平和를 定着하는게 우선 해야할 前段階 目標라는 式의 설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注意할것이 있다. 다름아니라 「일·뉴송」의 말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사람들의 얘기나 理念에만 共感하는 性向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團體·「미디어」가 提示하는 意見이나 主張만 받아들인다. 따라서 평소 大衆의 信賴를 받지 못하는 媒介體나 사람을 내세워 統一政策을 電波시키려다가는 逆效果를 낼수 도 있다는 事實이다. 이는 특히 전파의 初期段階에서 조심할 일 이다.

또 「매스컴」에 의한 統一論의 전파에는 「매스컴」의 기능 自体 의 내재적 限界가 있다는 點을 考慮에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思想이나 「아이디어」 또는 主張이 普及되는데는 대衆 5단계를 거치는데 「매스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衆 5단계를 첫째 感知, 둘째 興味, 셋째 評價, 넷째 實驗, 다섯째 採用的 단계로 分類한다면 「매스컴」은 段階別로 각각 다른 影響力을 미치게 된다.

「매스컴」이 가장 큰 效果를 발휘할수 있는것은 感知와 興味の 段階나 마지막 採用的 단계에 가까울수록 「매스컴」의 影響력은 줄어든다. 다시말해 評價 以後의 단계에서는 「매스컴」 以外의 「

른 宣傳, 전파 「미디어」들이 보다 重要해진다. 따라서 모든 단계에 걸쳐 「메스콤」에만 依存하면 적지않은 위험성이 따른다.

그렇다면 實際로 統一政策電波를 위한 「메스콤」活用に 있어선 어떤 原則을 따라야 할것인지 檢討해볼 必要가 있다.

우선 신빙성이 있어야겠다. 전달자를 大衆이 믿고 있을때 그 전파·宣傳은 成功한다. 신빙성있는 傳達者가 電波하는 「메시지」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만 그렇지못한 전달자는 진실을 말해도 일단 의심을 받게된다.

둘째 비용이나 統一政策에 담겨진 설명내용이 大衆의 固定觀念이나 가치관과 兩立할 수 있어야 하며 大衆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明確性이나 「메시지」는 항상 단순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大衆이 理解 할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확한 주제, 「슬로간」으로 요약되어야 한다.

네째 지속성과 일관성이나 깊은 뿌리를 국민에게 내리기 위한 소재는 반복되어야 한다. 다만 반복에는 언제나 조금씩의 변화를 주어 大衆에게 싫증이나 역정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는 大衆의 能力을 勘案한 전파를 해야한다.

이러한 原則에 따라 우리의 平和統一政策과 北韓의 武力赤化統一 야욕을 기사·해설·論評·소설·「드라마」등 각종표현수단을 통해 꾸준히 전파해야 할 것이다.

#### ④ 北傀宣傳攻勢의 封鎖

北傀는 73年 우리의 6·23 統一自由政策宣言 以後 이른바 金日成의 5大統一綱領을 들고 나와 선전공세를 펴고 있다.

그들은 특히 韓半島의 平和政策을 위해 南北韓의 同時 「유엔」加入에 反對하지 않는다는 宣言을 統一을 拋棄하고 조국분단을 永久化하려는 것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그들의 5大綱領은 大韓民國을 國際적으로 무력화하고 安保態勢를 해치며 内部的으로 교란하려는 目的을 담고 있다.

이 提案은 前述한바도 있지만 분명히 위장된 平和攻勢다. 이러한 北韓의 平和攻勢에 대한 우리側の 反擊이 「수동적 반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수동적 반박의 消極的 자세를 완전히 脫皮하여 平和統一攻勢에 있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도록 世界情勢의 變化에 따른 기민한 대처를 해야 하겠다.

7. 4 声明以後 우리도 對中立國 및 共產圈外交를 強化하고 있지만 北韓도 對中立國 뿐 아니라 對西方外交까지 치열하게 벌이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外交攻勢는 우려할만한 成果를 거둘게 事實이다.

우리가 아직 共產圈國家와 修交하지 못하고 있는 反面 北韓은 北歐·東南亞·中南美에서 자유진영국가와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 그들의 5大綱領이 위장平和攻勢에 不過하지만 國際政治舞台에선 北韓의 主張을 額面 그대로 받아드리는 側도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식민지에서 獨立한 「아프리카」 中東 新設국중에는 6. 23 선언을 北傀의 宣傳대로 祖國統一을 포기한 現狀고착으로만 받아드리는 나라가 상당히 있는 形편이다.

우리는 北韓의 평화선전공세가 국제적으로 主효하고 있는면을 인정하고 거것 선전의 正體를 暴露하는대로 국가적인 努力을 경주해야겠다.

#### ⑤ 海外弘報

北韓의 對外宣傳에 效果的으로 對処하고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널리 海外에 弘報하기 위해선 다음 4가지 前提가 갖추어져야겠다.

그것은 對外弘報의 基本方向定立, 北韓의 對外宣傳에 對한 깊은 研究, 對外弘報體系의 組織化 및 能率化, 充分한 豫算確保가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對外弘報의 基本방향이 定立되어야 겠다. 基本방향은 自由 民主主義體制가 共產主義體制에 比해 우월하고 살기 좋다는 根本原則 에서 出發해야 한다. 共產主義者들과 對抗宣傳을 벌이는 만큼 自由 民主主義의 長점이 強調되고 北韓의 韓國誹謗宣傳의 虛偽성이 暴露 되는데 主眼점이 두어져야 한다. 특히 統一政策에 있어선 우리의 平和志向성과 北韓의 戰爭志向의 底意를 說明하는데 主力해야 할것 이다.

또 對外宣傳에 있어서는 상대국 國民의 信念, 態度, 性向을 勘察 에서 기동력 있게 對處해야 한다. 新生國에서는 平和 보다도 民族統一의 意志에 重點을 두어야 하고 선진國에선 平和와 民主主義 가 對外弘報의 力점이 되어야 하겠다.

北歐國家나 美國에서 까지 金日成우상화 만을 宜言하든 北韓의 宣傳이 우승꺼리가 됐던 事實은 對外弘報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事例 인 것이다.

둘째 北韓의 對外宣傳에 對한 正確한 把握과 깊이 있는 연구가

必要하다. 對抗宣傳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爲해선 相對의 戰術을 正確히 把握해야 하기 때문이다. 特히 共產主義 宣傳原則은 持續的이고 반복적임을 감안, 우리도 斷片的인 情報에 따른 對抗宣傳보다는 그들의 宣傳基調에 對抗하는 長期的인 海外弘報에 主力해야 할 것 같다.

세계 對外弘報의 體系化 및 能率化다. 政府는 文公部 산하에 海外弘報官을 두어 海外弘報의 主力等으로 삼고 있다. 전문적인 弘報要員을 길러낸다는 點에서 質的으로 평가 되나 外交官 및 各部 處의 派遣團도 모두 海外弘報體系에 動員하는 體系化도 必要하다.

북에 무엇보다도 時急한것은 對外弘報豫算의 大幅 擴大다. 效果的 宣傳은 아니라 優秀한 靚織, 우수한 선전자, 우수한 선전연구자 確保를 위해서도 豫算의 충분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北韓은 이미 對外宣傳에 우리에 비해 막대한 豫算을 投入하고 있다는事實을 깊이 인식, 對峙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⑥ 統一教育

統一되기까지의 올바른 統一觀과 統一後 완전히 다른 體制에서 살아온 北韓住民들의 教化를 위해서도 學校教育만큼 基本的인 것은



없다.

이것을 형성하는 靑少年期에 있어 教育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우리 統一政策 및 体制의 當爲性과 우수성 그리고 北韓体制의 弱點 및 그들의 赤化統一政策의 호전성을 이론적으로 教育해 놓으면 이야말로 가장 깊이 뿌리박은 전파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통일이 達成됐을때 北韓住民의 思考方式과 行動樣態를 고치는 일은 難事 중의 難事일 것이 쉽게 짐작된다.

우리측의 對備가 充分치 못할때는 오히려 말려들 위험성조차 없지 않은것이다. 오늘날 統一에 대비한 教育問題의 研究가 切實한 國家的 問題로 提起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선 南韓內 各급학교의 教育과정과 各種 成人 社會教育 「프로그램」의 전영역에 걸쳐 치밀하게 짜여진 統一教育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統一教育의 方向은 感情的인 잘못에서 反共口號를 외치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統一教育의 目的이나 基本的 테두리에는 적어도 다음 要素가 包含되어야 겠다. 첫째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의 當爲性 및 歷史的,

必然性, 둘째 北韓의 平和공세의 위장성과, 赤化統一基本政策의 反民族性, 셋째 韓國社會의 傳統的價值問題, 넷째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그 제도 및 민주적 生活樣式의 本來的 모습 다섯째 공산주의 이론의 변천과 그 전략, 여섯째 공산국가의 생활현실, 일곱째 民主共産 對決의 기원과 양상, 여덟째 統一韓國의 未來像 등이다.

이러한 敎育, 「프로그램」은 내용이 다채롭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必要가 있다.

#### ⑦ 對北放送

7. 4 共同聲明精神에 따라 南北韓은 72년 10월 11일을 期해 相互非難 誹謗을 中止하기로 合意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側의 「統一革命黨 목소리방송」만은 계속했다. 그들로서는 統革黨은 南韓의 지하민중조직이며 따라서 그들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7. 4 성명이나 10. 11 合意에 의한 규제나 계약을 받을 성질이 아니란 억지를 썼다.

드디어 그들은 73년 7월 1일을 期해 統革黨 목소리 방송을 평양 방송과 朝鮮中央放送이 中繼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8월 28일 金英柱의 聲明이후 10. 11 合意는 事實上

완전히 깨어졌다.

이제는 南北間의 對南 對北 방송과 비난이 7.4 聲明 以前으로 完全 還元한 느낌이다.

北韓의 對南放送은 8.28 以後 南韓의 권력구조에 타격을 가하면서 政權의 變質, 政權의 국제적 고립화, 大衆에 대한 反政府煽動 및 조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도 對內, 對以北放送에서 국민단결의 求心點을 형성하는 게 時急한 문젯점이다.

여지껏 우리의 對內放送과 對北放送은 마치 두개의 論理的範疇를 構成하는 別途의 世界같은 인상을 주어왔다. 對內的으로는 維新·새마을정신과 商業主義가 혼합되어 放送되면서 對北放送에서는 주로 共產主義의 非人間性만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對北放送은 南韓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統一이란 目的을 向한 전략적 立場에서 對內 對北 방송의 기본이론이 同一距離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 같다. 즉 우리에게 옳은 것은 北韓住民들에게도 옳은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論理가 그것이다.

또한 北韓共產主義 集團을 하나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現實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운동방침을 법칙대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그것을 조정하려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리고 放送体制에 있어서는 官放이나 영리의 논리에 입각한 民放을 막론하고 对北放送의 공통기준과 보조를 위한 협의기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6 . 結 論

## 六. 結 論

心理戰은 基本的으로 眞實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게 최근 강조되고 있는 心理戰의 이론이다. 眞實에 바탕을 둔다는 말은 眞實을 効果적으로 전파시키는 것은 물론 謀略과 偽計를 전파해야한다는 의미다.

또한 心理戰은 相對方의 態度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지만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직접상대방을 변화 시키기 보다는 변화할 수 있는 정세를 가능한限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전파시키는 心理戰도 마찬가지다. 統一政策에 있어서 최대의 지식은 統一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명제와 가능한限 同族相殘은 피해야겠다는 民族의 念願이라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시말해 統一의 성취와 平和의 維持하는 一見 모순되는 듯한 목표인 것이다. 이 두가지 목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성되고 組合되어 전파되느냐에 統一政策전파를 위한 心理戰의 要諦가 있는 것이다.

心理戰의 대상으로는 대체로 5人의 相對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① 철저한 反對心념을 가진 사람, ② 反對의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 ③ 동조적이지만 무관심한 사람, ④ 동조적인 사람, ⑤ 願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할수있는 사람 등이다.

이중 心理戰의 주요대상은 ②와 ③이다. ①은 모처럼의 노력이 그만큼의 效果를 내지못한다. ④, ⑤에 대해서 단지 변함없이 이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공급하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언제고 변화될 수 있는 계기의 발생을 위해서 장기적인 視野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統一政策電波를 위한 對象中 ①, ②는 北韓住民 ③, ④, ⑤는 北韓住民에 대한것이 될것이다.

統一의 달성과 平和의 유지라는 論理의 일관된 次元에서 대상 「카테고리」별로 多樣한 方法의 心理戰이 필요하다. 동시에 北韓의 武力赤化野慾이 反民族的이며 同族의 相殘을 피해야한다는 가장 큰 목표의 하나를 抹殺하려는 것이란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겠다.